

# 광주·전남 지자체 탄소배출권 거래제 ‘발등에 불’

### 폐기물 직영 처리 목표·순천시 구매 대상...광주도 거래제 규제 받아 공익 목적 환경기초시설 포함에 난감...규제 피하려 위탁운영 고심도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온실가스 대부분은 기업에서 배출될 것으로 여겨 지자체는 예외로 생각했지만, 폐기물들을 직영으로 처리하는 광주·전남 지자체들이 이미 배출권을 사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지자체들은 공공·공익사업까지 탄소배출의 규제를 받는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일부 지자체는 배출권 구매를 피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는 “지난해 온실가스를 배출 할당량(4만 8831t)보다 9910t 초과 배출해 탄소배출권 구매비용으로 최근 1억 1700여 만원을 지출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 환경기초시설은 일정 수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지난 2015년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의 규제를 받는다.

전체 환경기초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년 평균 12만 5000t을 넘거나 단일 시설이 2만 5000t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목포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3년 평균 단일 시설(위생매립장·3년 평균 온실가스 사용량은 4만 2518 t)에서 발생한 온실가스가 기준치를 초과해 지난 2021년부터 탄소배출권 구매 대상이 됐다.

목포시는 목포 지역 위생매립장이 한국밖에 없어 쓰레기가 한데 몰리는데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현재 매립장의 98%가 포화된 상태고 2030년에는 매립장 이용 및 설치가 전면 금지되는 데 따라 매립장 추가 설치 계획 등은 없어 탄소 배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목포 뿐 아니다. 순천시도 올해부터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됐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었으나 2018년부터 ‘신재생 에

너지 보급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태양광 등을 적극 설치해 온실가스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는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단일 시설 수치가 864t 가량 높게 나타나 다시 규제를 받게 됐다.

순천시는 규제 대상이 된 원인으로 정부에서 실시한 ‘하수관·오수관 분리사업’ 시행 이후 오수의 농도(BOD)가 높아짐에 따라 화학처리 과정에서 추가로 탄소 발생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환경관련 시설은 몰리고 관련 규제 등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점차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실정에 놓이고 있는 것이다.

광주에서도 광주 전역에 있는 16개 환경기초시설

에 대해 지난 2018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초과금을 지불한 적은 없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광주시에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량(18만 3766t)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든 할당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환경기초시설이 탄소배출권 구매제 대상이라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자체 환경시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인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규제를 받아 난감한 상황”이라면서 “지자체 차원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이 정부의 환경 정책 눈높이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인 실정이라, 지자체가 배출권을 구매하는 사례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자체는 기초환경시설의 위탁운영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탁으로 운영할 경우 위탁업체가 탄소거래제 주체가 운영 업체로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탁 운영은 담당 공무원 감소, 위탁비용 발생 등의 문제 뿐 아니라 온실가스 초과 배출 시 위탁업체가 규제를 받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 본래 의미가 퇴색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필 광주환경연합 생태도시국장은 “배출권 거래제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공공기관은 위탁업체를 통해 꼼수 행정을 펼치지 보다는 저탄소 정책 등을 펼쳐 공공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초등생 6명 식중독 의심 증상

광주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광주시 남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8시 4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6명이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당국은 지난 3일 중식으로 제공된 급식이 문제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에 나섰다. 이날 점심 급식은 350여명의 교사와 학생이 먹었는데 그 중 3학년 학생 6명이 구토, 설사 증상을 보였지만 병원진료를 통해 모두 호전됐다고 밝혔다.

남구보건소는 급식실 내부 시설 및 교실 등 주변에서 채취한 검체 25건을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해 식중독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위탁업체에 대한 검체 검사는 광산구보건소와 협력해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오는 7일까지 급식 제공을 중단하고 개인도시락으로 중식을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



### 승강기 사고 대비 시민 구조 이렇게

광주소방 119구조대원들이 5일 광주시 서구 마북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역에서 열린 '2023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에서 에스컬레이터에 발끼임 사고를 당한 시민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무단 퇴근한 경찰, 아내 폭행

현직 경찰이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퇴근한 뒤 배우자를 폭행해 경찰에 넘겨졌다.

광주남부경찰은 5일 전남경찰청 소속 A(52)경위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월 16일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퇴근하고, 배우자 B씨를 찾아가 삼단봉으로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삼단봉은 경찰에서 지급한 것이 아니며 직접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 4월 광주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B씨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B씨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전남경찰청 상해 건과 별개로 A씨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과 관련해 조사 중이며, 조사를 마치는대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광주·전남 ‘유령 영아’ 34건 조사 중

### 경찰, 아이 안전·부모 소재 추적

광주·전남 경찰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가 안 된 일명 ‘유령 영아’ 사건 34건을 조사하고 있다.

5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광주에서는 14건, 전남에서는 20건에 대한 사례를 확인 중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받은 14건의 수사의뢰 중 4건은 소재를 파악하고 추가 확인을 하고 있다.”

나머지 10건(베이비박스 7건, 입양시설 1건, 친부 1건, 친모 병사 1건)에 대해서는 소재 파악에 나섰다.

전남에서는 총 24건의 수사의뢰가 있었고 이중 4건(사망 2건, 입양 1건, 해외출국 1건)은 소재가 확인돼 종결됐다.

나머지 20건 가운데 베이비박스에 맡겼다는 사례는 13건, 출산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 2건, 보호자 소재불명 5건으로 경찰은 사실 관계와 아이 안전 여부를 확인, 부모 소재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소재 파악을 거쳐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공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오는 7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수사 의뢰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혐의점이 있더라도 베이비박스 유기의 경우 사안에 따라 영아유기 혐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지법 공탁관, 외교부 배상금 공탁 이의신청 ‘불수용’

### 재판부가 서면 심리로 결정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를 상대로 정부가 제시한 제3차 대위변제 배상금의 공탁 수리여부가 광주지법 판사의 손으로 넘어갔다.

‘불수용’ 결정이 나오자 마자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등 관련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어 그동안 강제동원 문제 해결 속도와는 다르게 배상금 공탁 여부에 대해서는 빠르게 처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에서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양 할머니에 대한 공탁 신청 불

수리를 결정한 광주지법 공탁관의 ‘불수용’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4일 오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이의신청을 받은 광주지법 공탁관이 ‘이유없다’는 판단을 내리자 광주지법은 관련 사건을 5일 오후 민사 44단독(판사 강애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따져 공탁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이과정을 거쳐도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재단은 법원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양 당사자를 반드시 심문해야 하는 필요적 심문 사건이 아니므로 관바로 결정을 할지, 심리를 열지 여부는 담당 판사에게 달려 있다”면서 “통상 이러한 경우 서면 심리로 결정을

해왔고 관련 절차가 지체 없이 진행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배상금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지난 3일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광주지법 공탁관은 양 할머니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서를 접수한 뒤 ‘불수용’ 결정을 했고, 이춘식 할아버지 등에 대한 공탁 신청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한편 같은 날 전주지법은 정부가故 박해옥 할머니 유족들을 상대로 한 공탁 신청도 법원이 지정한 보정 권고기간(4일까지)을 넘겼다는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